

야당,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 20일 처리 목표

불법 선거개입·국정농단 진상규명 19일 현안질의에 명씨 증인 채택 민주 "輿, 반대는 연루 자백" 압박 국힘 "이재명 대선 고속도로"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0일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될 것 같다. 이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정하는 것이 민주당이 목표로 삼을 시간표"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도 열기로 하고, 명 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에 대한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정 검찰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관련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왜 하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야당 때문이라는 (윤 대통령의) 헛소리보다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 집권을 시도했다는 게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 씨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는지, 얼마나 많이 불법과 부정부리에 연루됐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고를 결사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안평환 시의원 "만화·웹툰 산업 지원조례 마련"

광주시가 만화·웹툰 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시의회 안평환(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만화·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광주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내 만



화·웹툰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만화·웹툰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되며 K-콘텐츠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웹툰 산업은 코로나19 기간에도 연평균 7.2%에서 9.2%까지 성장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정성현 기자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되며 K-콘텐츠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웹툰 산업은 코로나19 기간에도 연평균 7.2%에서 9.2%까지 성장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정성현 기자

흥기월 시의원 "광주시, 소상공인 실질 지원해야"

광주시의회 흥기월(사진) 의원이 12일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흥 의원은 이날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둔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려면 지자체의 능동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흥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1인 자영업자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줄었고, 2024년 소비자판매지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또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는 등 지역 체감경기가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흥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2024년 4분기 동구 총장로·금남로 일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4.36%로, 점포 4곳 중 1곳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역 밀바닥 경제의 얼어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현 기자

임미란 시의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재정지원 절실"

류마티스와 퇴행성 관절염 전문병원인 빛고을전남대병원이 만성 적자로 존폐 위기에 처한 가운데, 행정기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미란(사진) 광주시의원은 12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외래진료 중단은 공공의료 붕괴와 의료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4년 개원한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전남대병원 자부담 297억원, 국비 250억원, 시비 110억원 등 총 657억원이 투입된 공공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현재 누적 적자가 700여원을 넘어서면서 외래진료 기능을 전남대병원 본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성현 기자

서왕진 "반도체·에너지 3법, 실질적 대안 필요"

보조금 등 경쟁력 지원 강화 우선 "졸속 처리 안돼... 청문회 열어야"

조국혁신당 서왕진(사진) 의원이 반도체와 에너지 3법 처리와 관련해 정치 공방이 아닌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에서는 의될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하 '에너지 3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도 논의 지연의 책임은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실제로는 12·3비상계엄 이후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산자중기위의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이끈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SK 하이닉스의 주 52시간 근무 운영 사례를 들며 "선부른 노동시간 연장



은 젊은 인재들이 미국이나 대만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분질적인 주 52시간 특례 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이를 제외한 반도체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3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소위의 충분한 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력망법의 경우 과거 전원개발촉진법보다 후퇴된 주민 수용성과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이 없다"며 "고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원안위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책임있는 역할 분담을 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해상풍력법과 관련해서는 "발의 취지에 맞게 계획입지와 윈스톱숍 도입, 주민 이익공유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 조정안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대형원전 1기 철회'와 '재생에너지 비중 일부 확대'를 조정안으로 내놓았으나, 2038년까지 필요한 신규 설비 4GW 중 2GW는 유보처리하는 등 전례없는 핏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탄소중립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상실한 채 원전 확장과 신규 발전 설비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등 졸속으로 작성됐다"며 "탄소중립에 눈감고 신규원전 건설에만 급급한 나머지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정부에 폭탄돌리기한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서 의원은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강화,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 재생에너지 세제 지원 확대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국회 상설기후특위 구성도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이재명, 오늘 김경수와 회동... 통합 행보 나서

친명·친문 갈등 봉합 주목 김부겸·임종석도 회동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한다.

이 대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끌어안으며 통합 행보를 부각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담긴 일정으로 풀이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 전 지사는 13일 오후 4시 30분 국회 본청에

서 접견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비공개로 만난다.

당내 통합과 비이재명계 포용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7일 민주당에 복당했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를 보고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당 직후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면서 "(이 대표가) '당에 다양성이 구현돼야 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과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중 내게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고, 이어 이 대표도 김여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지난 대선에서 진 것에 대한 제일 큰 책임이 제게 있다"고 화답하는 등 양측의 갈등 봉합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당내 통합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앞으로 김 전 총리와 임 전 실장과의 만남 예정이다.

다만 김동연 경기지사와 회동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선욱 기자